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북 평가: 북핵 폐기는 멀어지는가?

최 춘 흠

(국제관계연구소 센터 선임연구위원)

I. 서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黨, 政, 軍 관계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대동하고 10월 4~6일간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영일 총리 등과 회담하였다. 원 총리의 방북은 중국 총리로서는 18년 만에 처음이며 2005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후 최고위급 인사의 방북인 셈이다. 북한이 2009년 4월 6자 회담에 참여치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어 2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유엔차원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 총리가 방북한 것이다. 본고는 원 총리의 방북결과를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원 총리의 방북결과 평가

첫째, 무엇보다 중·북 양국이 북핵 문제해결에 있어 서로 체면을 살려주는 소위 “체면유지 정치(face-saving politics)” 양상을 보였다. 중·북 양국이 서로의 체면을 살리다 보니 북핵문제 해결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북한의 체면과 반발을 고려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이전 보다 더욱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북핵 포기보다는 핵비확산, 핵비확산 보다는 북한의 안정을 더욱 선호한다는” 그동안 우려했던 상황이 이번 원 총리 방북에서 나타났으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노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의 체면, 실제적으로는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여 6자회담 북한복귀를 공개적으로 북한에 촉구하지 못하였다. 향후 북한이 6자회담 참여 전제조건으로 다른 회담방식을 제시할 경우 중국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중국은 대북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는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고 표명하였다.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규모에 버금가는 원 총리 방북단을 구성하여 북한과의 여러 분야에 걸친 협의와 협력 확대를 제시하였다. 원 총리와 함께 중국 외교부장, 6자회담 중국측 대표인 외교부부장, 당대외연락부장,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위원장, 상무부장, 문화부장, 인민해방군 총 정치부부주임 등이 같이 방북하였다. 이번 방북단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북한과 黨對黨 교류, 북핵문제와 동북아정세, 양국의 경제발전과 협력방향, 문화 및 군사 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한 것은 북핵문제에 의해 소원해진 대북 관계는 향후 대북 영향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그루 사태로 인해 국내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안정이 더욱 중요

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과 개입정책은 북한경제가 중국경제에 더욱 의존하고 있어 확대 지속될 것이다.

셋째, 원자바오-김영일 총리회담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중국은 “능력이 되는 한” 북한을 지원할 것임을 언급한 반면에 김영일 북한 총리는 오랜 기간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중국은 “북한민민의 생활을 고려한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목에서 이제는 “능력이 되는 한”으로 바뀌 대북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원 총리는 북한과 5개년 중·북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적어도 약 20억 달러 상당의 경제원조와 투자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총리는 경제, 무역, 교육, 여행분야에서 협력하는 협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압록강에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비용을 중국이 부담하는 중·북 교량 건설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대규모 무상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중국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차원의 대북 제재 성실성을 6자회담 참여국들에게 주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북한의 안정이 더욱 긴요하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더욱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이다.

넷째, 왜 중국과 북한이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안에 합의하였는가이다. 우선 북한은 중국의 대규모 무상지원에 감사하면서도 미·북 협상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다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강력히 설득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입장 때문에 북한의 설득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북한이 오히려 중국에 대해 미·북 협상에 있어 자신의 입장을 더욱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한 셈이 된 것이다. 북한 총리가 이번 중·북 총리회담에서 양국간 정치적 상호신뢰를 심화시켜나가자고 언급한 바 있었다. 중국이 대북 대규모 무상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유엔차원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불만과 정치적 불신이 많기 때문에 중국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 역시 미·북 협상에서 북한이 자국의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정치적으로 북한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III. 한국의 대응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이후 북핵문제와 중·북 협력관계 확대에 대해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하는가?

첫째,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협력과 북한의 핵보유 의지로 인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실현은 장기간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북핵 폐기와 교환하는 미·북 관계정상화 협상과 남·북·미 회담을 미국과 북한 측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유엔차원의 대북 제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대북 무상지원은 인도적 차원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과 무상지원으로는 북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북한에 대해 식량난 해소를 위한 남북한 합동조사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향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북한으로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모니터링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생활 제고에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늦추면 늦출수록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어 한국과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한국은 국방력 강화와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의 군사위협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